

보도자료

이 자료는 10월 15일(월) 09:00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선임전문원 Tel.02-3299-1263

한-WB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KSP를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 기간: 2012년 10월 15(월) ~ 16(화)
- 장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최: KDI국제정책대학원 · 기획재정부 · 세계은행

□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0월 15, 16 양일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제하의 KSP 지식공유포럼을 개최, 인적자원, 기술발전, 지역개발 등 주요 개발정책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표적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KSP 사업의 확대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지식공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김 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 교수, 노부히로 기요타키 프린스턴대 교수 등 개발정책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정부·기업·학계의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할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포럼 첫날인 15일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적·분야별 연대 강화'를 주제로 한 김 용 세계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개발정책의 새로운 프런티어' 등 제하의 세 개 모듈을 통해 전통적 개발모형의 실효성 및 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발정책의 과제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
- 또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KSP 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제사회와의 지식공유협력 확대를 통한 협력국가간의 상생번영을 위하여 새롭게 KSP 로고를 론칭함
- 포럼 둘째날에는 '개발정책 분야별 발전경험의 지식공유' 모듈 아래 기술발전, 지역개발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등 개발협력 핵심 이슈들에 대하여, KSP 모듈화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와 기타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문의: 김정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발전경험연구팀 연구원

- ◆ 첨부#1. 프로그램
- ◆ 첨부#2. 주요 연사 프로필
- ◆ 첨부#3. 발표 및 토론 내용

❖ 첨부#1. 프로그램

첫째 날. 10월 15일(월) 오전

시 간	일 정
08:30 ~ 09:00	등 록
09:00 ~ 09:15	<p>개회사 및 환영사</p> <p>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p> <p>환영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p>
09:15 ~ 09:45	<p>기조연설</p> <p>김 용 세계은행(WB) 총재</p>
09:45 ~ 09:50	<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로고 론칭</p> <p>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p>
10:00 ~ 10:50	<p><Module I>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세션 1. 개발모형의 합의와 새로운 도전</p> <p>사 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p> <p>발 표 존 윌리엄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p> <p>토 론 산제이 프래드한 세계은행연구소(WBI) 부총재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p>
10:50 ~ 12:20	<p>세션 2.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개발정책 과제</p> <p>사 회 파멜라 콕스 세계은행(WB)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p> <p>발 표 1. 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지난 20년 동안의 무작위 추출 실험으로부터의 교훈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학교 교수</p> <p>발 표 2. 금융위기와 거시경제 및 경제발전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p> <p>토 론 정 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시릴 필러 세계은행(WB) 국제협력담당 부총재 조운제 서강대학교 교수</p>

첫째 날. 10월 15일(월) 오후

시 간	일 정
12:20 ~ 13:40	공식오찬
13:40 ~ 15:10	<p><Module II>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세션 3. 제도 발전과 공공부문 개혁</p> <p>사 회 현오석 KDI 원장</p> <p>발 표 1. 제도변화와 역량발전을 위한 리더십 개혁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학교 교수</p> <p>발 표 2. 세계은행과 거버넌스: 논의의 진전 로버트 베셜 세계은행(WB) PREM 공공부문 선임전문위원</p> <p>발 표 3. 원조 의존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로의 전환: 한국 은 어떻게 성공했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p>토 론 메레디스 우정은 버지니아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및 대학원 학장 좌승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p>
15:20 ~ 16:50	<p><Module III> 개발정책의 새로운 프런티어 세션 4. Global Development Debate - 개발모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할 것인가?</p> <p>사 회 케빈 루 세계은행(WB)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아시아지역 이사</p> <p>패 널 존 윌리엄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학교 교수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현오석 KDI 원장</p>

둘째 날. 10월 16일(화)

시 간	일 정
09:00 ~ 10:00	<p><Module IV> 개발정책 분야별 발전 경험의 지식 공유 세션 5. 기술혁신적 생태계 구축</p> <p>사 회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p> <p>발 표 1. 후발주자를 위한 기술발전 및 역량개발 모델: 한국의 사례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p> <p>발 표 2. 정부정책과 CoPS 발전 : 이란의 가스 터빈 산업 메디 마지드피 아미르카비르 공과대학 교수</p> <p>토 론 안상훈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부장</p>
10:10 ~ 11:10	<p>세션 6.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과 녹색성장</p> <p>사 회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p>발 표 1. 새마을운동과 성공마을 사례연구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p> <p>발 표 2. 도시 녹색화와 경제성장 샤희드 유서프 조지워싱턴대학교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p> <p>토 론 에드워드 리드 경희대학교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11:20 ~ 12:20	<p>세션 7.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양성</p> <p>사 회 소아밀리 안드리아마난자라 세계은행연구소(WBI) 선임 이코노미스트</p> <p>발 표 1.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기여: 유럽경 협의 실증분석 조 릿즌 마스트리흐트대학교 교수</p> <p>발 표 2. 경제성장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역할: 한국의 사례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p>토 론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샤희드 유서프 조지워싱턴대학교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p>
12:20 ~ 14:00	<p>폐회 및 환송오찬</p> <p>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라지 날라리, 세계은행연구소(WBI) 성장과 경쟁력부문 부장</p>

❖ 첨부#2. 주요 연사 프로필

개회식

현오석 KDI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 現 KDI 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 現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 세계은행 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인류학, 의학 박사 ○ 現 세계은행 총재

제 1세션. 개발모형의 합의 및 새로운 도전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한국무역협회 회장 ○ 現 고려대 석좌 교수 ○ 現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존 윌리엄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세계은행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 前 세계통화기금 고문 ○ 現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산제이 프래드한 세계은행 연구소 부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現 세계은행 연구소 부총재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 슬론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제 2세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개발정책 과제

파멜라 콕스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대 경제학 박사 ○ 前 세계은행 중남미캐리비안지역 부총재 ○ 現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現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現 하버드대 교수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前 뉴욕 미연방준비은행 선임 경제학자 ○ 現 프린스턴대 교수
시릴 밀러 세계은행 부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세계은행 유럽대표 ○ 現 세계은행 부총재
조윤제 서강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 前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 ○ 現 서강대 교수
정 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3세션. 제도 발전과 공공부분 개혁

현오석 KDI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 現 KDI 원장
제니퍼 워드너 프린스턴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일 정치학 박사 ○ 前 하버드대 교수 ○ 現 프린스턴대 교수
로버트 베셜 세계은행 PREM 공공부분 선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 現 세계은행 PREM 공공부분 선임전문위원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前 버지니아 공대 조교수
- 前 KDI 부원장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메리디스 우정은 버지니아 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및 대학원 원장

- 前 노스웨스턴대, 미시건대 교수
- 現 버지니아 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및 대학원 원장

좌승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 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前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 現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제4세션. Global Development Debate
개발모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할 것인가?

케빈 루 세계은행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아시아지역 이사

- 前 세계은행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아시아 사무소 대표
- 現 세계은행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아시아지역 이사

존 윌리엄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前 세계은행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 前 세계통화기금 고문
- 現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現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現 하버드대 교수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 교수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前 뉴욕 미연방준비은행 선임 경제학자
- 現 프린스턴대 교수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 교수

- 예일 정치학 박사
- 前 하버드대 교수
- 現 프린스턴대 교수

현오석 KDI 원장

-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 現 KDI 원장

제5세션. 기술혁신적 생태계 구축

박진근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연세대 명예 교수 ○ 現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이근 서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UN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 現 서울대 교수
메디 마지드퍼 아미르카비르 공과대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SPRU 기술정책학 박사 ○ 現 이란 아미르카비르 공과대학 교수
안상훈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 경제학 박사 ○ 現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부장

제6세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개발과 녹색성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 前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現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 現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사회학 박사 ○ 現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샤히드 유서프 조지워싱턴대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現 조지워싱턴대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드워드 리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콘신대 개발정책학 박사 ○ 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 공공정책 및 환경계획학 박사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7세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개발과 녹색성장

소아밀리 안드리아마난자라 세계은행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 메릴랜드대 경제학 박사
- 現 세계은행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조세프 릿즌 마스트리흐트대 교수

- 前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
- 前 마스트리흐트대 총장
- 現 마스트리흐트대 교수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MIT 경제학 박사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샤히드 유서프 조지워싱턴대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現 조지워싱턴대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

❖ 첨부#3. 발표 및 토론 내용

Session 1. 개발정책의 합의와 새로운 도전

발표. 주요 개발정책이슈에 관한 의견 차이 존 윌리엄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본 발표에서는 개발정책에 관한 논의 중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온 내용보다는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5가지 정책이슈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발정책의 합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정부와 시장: 최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기조가 시장주의에서 정부 개입주의로 변화하는 경향.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옹호하나, 정부와 시장이 어떤 형태로 혼합되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
- 2)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특정한 생산활동을 권장하거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정부는 특정한 상품 생산을 장려하거나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을 수립, 추진함.
 -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외부성(externalities)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3) 高환율정책은 성장과 경제개발에 기여하는가?
 - 많은 사람들은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과 경제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음.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수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대신 高환율정책을 채택.

- 저자는 高환율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통하여 결국 투자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4) “중진국의 함정”은 존재하는가?

- 많은 低소득 국가들은 어느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하지만, 高소득국가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몇몇 국가만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음.

5) 민주주의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체제가 필요한가? 경제개발이 진전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가?

- 1980년대에는 인도의 낮은 성장률과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높은 성장률을 비추어볼 때 민주주의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그러나 동유럽국가를 포함한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주주의와 성장은 병립할 수 있음.
- 민주주의와 성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저자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개발정책 이슈에 대한 논쟁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1) 많은 경제학자들이 혼합경제를 옹호하고 있기에 정부와 시장에 관한 논의는 특별한 해답 없이 계속될 것임.
- 2) 관료들에게 정책 의사결정권을 주는 대신, 기업들에게 신상품을 생산할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산업정책은 불필요할 수 있음. 규모의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필요.
- 3) 高환율정책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음.

- 4) “중진국의 함정”과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어떻게 중진국들이 그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음.
- 5)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가 개발을 돕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

Session 2.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개발정책과제

발표 1. 보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지난 20년 동안의 무작위추출 실험으로부터의 교훈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1. 연구 개요

- 인적자본 발달부문에서의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에 관한 연구는 1995년을 이래로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무작위추출 실험 연구의 도입에 의해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음.
- 이 논문은 건강에 관한 무작위추출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실증 증거의 개관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보건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교훈과 특히 정부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고찰함.

2. 보건 문제에 관한 실증 증거

- 저자는 저소득으로도 높은 건강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베트남의 기대수명에 관해 1900년대 일인당 미국소득의 1/5 임에도 불구하고 70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음.
 - 이는 전염병 등의 공공 보건을 해결하기 위한 면역주사와 항생 물질이 비싸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
-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수명이 46세인 것을 보면, 아직 많은 나라에서 개선 가능한 건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백신, 모기장과 같은 이미 이용 가능한 의료 기술과 공공 건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과 실제 활용이 어렵기 때문.
- 기존의 의료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과 실제 활용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담

시켜야 하는 지에 관한 디자인이 중요한 이슈가 됨.

○ 의료수가가 비싸면 이용율이 떨어질 것이고, 의료수가가 무료이면 의료 서비스와 제품이 오용됨.

□ 정부 또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발성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의 예로, 케냐의 기생충 감염률 감소가 학교 결석률을 25% 줄여 교육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이끌어 냈는지에 대해 제시.

□ 의료수가에 특정한 개입을 통해 의료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키고, 조건부 현금이체 (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비용효율이 높으면서도 간단하고 싼 기술로 보건증진을 할 수 있는 예로 면역예방주사, 모기장, 정수처리, 구충약 공급 등을 들고 있음.

발표 2. 금융위기와 거시경제 및 개발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1. 연구 목적

- 본 발표는 2007년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그 경험 이 주는 거시경제 정책 및 경제개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함.

2. 자산거래의 자유화

-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기존의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는 자유무역으로부터 오는 이득의 관점에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주장 하나, 자본거래의 핵심인 신용(credit)은 같은 시점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거래와는 달리 기제간 (intertemporal) 거래이므로, 채무불 이행이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자유무역 (free trade)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금융자산/신용거래에는 담보가 요구되고, 자산의 담보능력은 기술, 정책, 경제제도에 따라 다르며, 국내대출과 국외대출에 대한 담보 자산간의 차이는 국내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에 통합된 정도에 따라 다름.
 - 국내 금융시장체제가 低개발상태인 경우, 생산력을 가진 이들은 충분한 투자자금을 얻지 못하며, 반대로 생산력을 가지지 못한 자본가들은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자금대출을 주저함. 따라서 자본계정의 자유화 이전에는 금융과 임금억제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이 낮음.
-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금융시장 억제와 임금 억제 간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음.

- 임금 억제가 클 경우,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적 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 기업 역시 해외자본을 차입하게 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됨.
- 금융시장 억제가 클 경우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대출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임금 및 고용이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됨.

3. 금융시장 가속도효과(financial accelerator)

- 발달된 금융제도가 자본거래의 자유화로 이익을 얻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
 - 선진 금융경제에서도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채무가 크고 신용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순가치를 감소시키는 충격이 발생했을 시, 자산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자산 사용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해당 회사들 자체의 순가치가 자산 사용가격보다 더 큰 비율로 하락하여 결국 실질총생산이 위축되어 금융충격이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
 - 시간의 역할에 대한 인지가 핵심. 자산시장은 과거의 저축(채무)과 미래의 기대가 현재의 시점에서 상호 작용하는 통로.

4.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 원죄 (original sin) vs. 예금인출 쇄도 (bank run)

- 원죄설: 위기 이전 지속 불가능한 자본유입으로 인한 비생산적 분야의 확장에 의한 호황기 중 왜곡된 자원배분이 원인.
- 예금인출 쇄도설: 차입자들의 자산의 유동성이 부채의 유동성보다 낮은 경우, 은행들은 만기보다 앞서서 순가치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을 유동화하려고 하고, 이로 인한 체계적인 자금유출의 위험이 원인.

5. 정책 함의

- 정책결정자들은 절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3가지 초기의 경고신호인 (1) 자산가격의 급상승, (2) 채무 규모의 총산출량보다 빠른 증가, (3) 상당한 정도의 자본유입을 감지하면, 예방적인 정책 조치(지준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 금리 인하와 전통적 팽창적 통화 정책 이외에도 유동적이고 고위험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비전통적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음.
-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은 금융과 비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와 노동과 자본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추세에 달려있음.
 - 현재 및 미래 모두 신용경색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금흐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이 모두 감소하고, 위기 종결 이후에도 단기 운전자금과 임시노동 고용의 회복은 빠르지만, 종신고용과 고정자본의 투자 및 실물자산의 회복은 느림.
 - 금융위기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 및 장기 성장 감소.
 - 어느 나라에서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금융과 저성장의 덩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제.

Session 3. 제도발전과 공공부문 개혁

발표 1. 제도 개선과 역량 발전 과정에 대한 리더십 개혁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많은 사람들은 재산권이나 법의 이행 및 조세와 같은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요인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
- 그러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개혁은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장 할 수 없음.
 - 특히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제도개혁은 거의 실행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 어떤 이들은 제도개혁이 큰 사건이나 위기를 겪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봄.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제도 개혁이 아주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봄. 저자는 여러 사례 연구들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저자는 “싱글 에이전시 (single-agency: 비교적 업무가 반복적이고 절차가 간단한 기관) 전환” 사례의 효과성을 강조. 즉, 토지 등기소, 면허 발급소, 조세국과 같은 싱글 에이전시 내에서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음.
 - * 남아공의 세정개선 사례: 세무당국이 새로운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을 제고시킴. 제도개선 T/F팀은 신규직원을 교육·선발하여 기존의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에 투입시킴과 동시에 개혁을 이끌 유망한 인재를 발탁.
 - * 남아공 성공사례는 기관 전체 차원에서 직급, 직무 모두를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한 운영 및 인사 개혁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성과평가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예임.

○ 이처럼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왜 현실에서의 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개혁을 이루려는 사람들 간에 많은 담론이 오가지만 이를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줄 모르거나, 개혁을 이루어야 할 지도자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치적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임.

□ 제도개혁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와이드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1)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며, 개혁가는 입증된 실적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신속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2)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개혁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 팀을 구성 유지하여 (team-up) 개선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

3)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소수의 이익집단은 제도개선의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a. 국민과 연합해 개혁을 지지하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여 개선을 이뤄야 하며,

b. 낙후된 환경하에 있는 저개발 국가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역 자치적으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음.

4) 대통령 및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은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해당 기관의 리더와 중앙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개선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각 기관의 산발적 개별 목표가 제도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수렴할 수 있게 해 줌.

5) 개혁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야 함. 유능한 인재는 공공 및 민간 부문 혹은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음.

발표 3. 원조 의존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로의 전환: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대규모 원조에 의존. 대부분의 타 수원국의 경우 원조가 국민의 의타심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음. 한국은 어떻게 원조경제에서 고도성장, 자립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는가?

- 한국의 196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세정개혁은 한국의 원조 의존 경제 → 자립경제로의 전환의 시발점.
 - 1950년대~60년대 전반기의 한국의 재정수입은 미국의 원조자금(對充자금)에 크게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 지속
 - * 재정적자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해 보전됨에 따라 만성적인 고인플레이 등 거시 불안정 초래
 - * 당시 탈세관행은 3대 사회악(밀수, 탈세, 도벌)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극심. 당시 한국의 재정은 상당부분 원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세무행정 개선유인이 크지 않았음.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납세의식(탈세를 항일운동으로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납세자는 탈세를 부도덕한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경향
 - 한국은 1966년 국세청 설치를 계기로 강화된 세무행정력(capacity to raise taxes)으로 단시일내에 세수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됨.
 - * 1966~69년: 연평균 세수증가율 51.2%
 - * 재정수입 해외원조 의존도:
'65년 34.2% → '70년 5.3% → '74년 0% (재정자립 달성)

□ 한국의 세정개혁 성공요인

- 상·중급 세무공무원의 인사혁신을 통한 기강 확립: 전국 6대 도시 소재 세무관서의 주무자급(6급)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중시한 인사원칙에 따른 전면적 인사전보조치 추진
- 세무사찰체제 일원화: 기존의 검찰, 경찰, 재무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세무사찰체제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보호와 국세행정의 정상화 도모
 - * 1966 - 1970년 기간 중 총 5,662건의 세무사찰 추진 (표 참조)
- 성실신고제도 도입: 녹색신고제를 도입하여 자진신고 납세 풍토 조성 (녹색신고 납세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등 유인 제공)

<표> 租稅犯則 조사: 1966-1995

	조사건수	추징실적 (백만원)			범칙 처리내용 (건수)		
		계	추징세액	벌과금	통고	고발	무혐의
1966-70	5,662	5,5941	3,919	2,022	3,969	50	1,643
1971-75	2,186	20,582	17,467	3,115	1,670	152	364
1976-80	1,611	75,149	66,535	8,614	1,256	250	105
1981-85	784	85,342	79,905	5,437	565	118	101
1986-90	98	76,467	75,919	548	33	64	1
1991-95	57	136,382	136,163	219	5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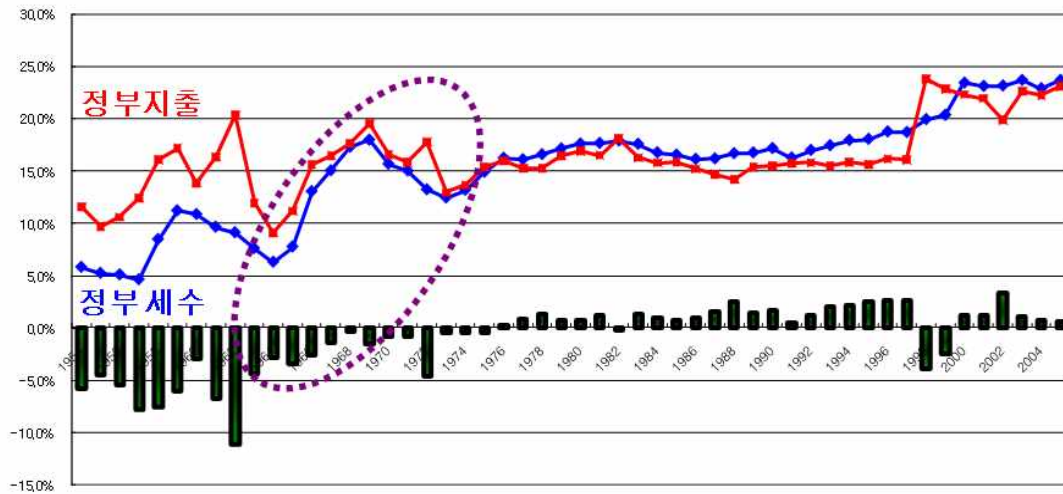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30년사 (1996), p1266

□ 한국의 세정개혁은 경제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세수기반 확충에 따라 재정건전도가 획기적으로 개선(그림 참조) 시킴으로써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은 물론,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공업화 정책 추진에 기여

- * 1962년에 차관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까지 차관도입 실적은 극히 부진
- *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등 지역개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물자지원(시멘트, 전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shared growth) 달성에 기여

<그림> GDP 대비 정부 세수, 지출 및 재정수지 (%)



Session 5. 기술혁신적 생태계 구축

발표 1. 후발주자를 위한 기술 발전 및 역량 개발 모델: 한국의 사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 논문의 배경: 정부의 산업정책 실효성 논쟁과 시각

- 주류 경제학에서 종종 정부는 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하여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는 '보이지 않는 발'로 묘사되고 있음. 실제로 많은 산업정책의 실패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경제개발은 기업이 성장하고 역량을 키우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민간기업의 역량 향상의 핵심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기회를 보장해 주는데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

2. 한국의 5개 산업 분야별 발전 경험의 유형화/모델화

- 본 발표는 지난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례별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정책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기에서 다룬, 철강 (포스코), 통신장비 (TDX), 자동차,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공작기계 총 5개 산업 사례에서 다양한 조건별로 효과적인 정부 개입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의 원형을 찾는다면, 그것은 3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민간기업: Private firms; 정부: Government)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GPG 모델이 될 것임.

- 이 세 기관은 각 조건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
- 즉, 모든 기술 발전은 연구개발, 생산, 시장이라는 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GPG 모형이란, 정부출연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민간기업이 생산을, 정부가 직접적인 조달 정책이나 관세 보호 등의 형태로 시장 확보를 담보해주는 모형임.

3. GPG: 한국형 산업발전 모델

- 전자교환기, 즉 TDX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GPG 모델의 사례임. 이를 GPG1이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역량 수준에 따라 여러 변형 모델이 존재함.
- GPG 모델의 좀 더 발전된 첫째 형태는 (이를 GPG2라 하자), 디지털 TV와 CDMA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유형에서는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일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되, 기술 트렌드를 관찰하고 대학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고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유형이다.
 - 이런 GPG2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이상 도달했을 때 가능함.
- GPG 모델의 또 다른 변형 모델은 정부기관이 연구개발과 생산 모두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민간기업의 능력이 없거나 프로젝트의 성격상 연구개발 보다는 생산이 중요한 경우에 해당됨.
 - 이를 GPG0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유형은 GPG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운데 P, 즉 민간기업의 역할이 빠진 GG 모델임.

- 초기 발전단계의 포스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 GPG0 모델의 반대는 GPG3 모델인데, 이것은 사실상 첫 번째 G 즉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 역할이 빠진다는 점에서 PG라고 할 수 있는 모델임.
 - 현대자동차라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룩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그 예임. 자동차산업의 발전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관세 보호를 통한 유치산업 보호 위주이고, 연구개발 투자는 현대자동차나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 요약하면,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1) 정부가 시장을 확보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모두를 담당하는 GPG0 모델,
 - 2)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GPG1 모델,
 - 3) 민관 공동연구개발을 하되, 민간기업이 주도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GPG2 모델,
 - 4) 민간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 모두를 담당하는 GPG3 모델
 - 이러한 모든 유형에서 관찰되는 최소한의 정부 기능은 정부 조달 정책의 형태로 초기 시장을 확보해 주거나 관세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음.

4. 요약: 모델의 공통 3요소

-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결국 기술능력의 혁신 담당자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은, 정부의 지원, 외부지식에의 접근 확보, 민간기업의 노력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음. 다만, 이 3자의 구체적 역할과 비중은 분야별로 단계별로 달랐음.

- 후발국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민간 기업의 역량, 기술 및 시장의 체제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음.

발표 2. 정부정책과 CoPS 발전: 이란의 가스터빈 산업

메디 마지드퍼 (이란 아미르카비르 공대 교수)

- 개발초기 단계에서의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왔으나, 정부의 산업정책이 Complex Product Systems(CoPS)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함.
 - 통상 CoPS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보통 정부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차별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란정부 산업정책이 CoPS의 하나인 이란의 가스터빈 산업의 기술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CoPS 생산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자 함.
- 이란정부의 정책은 이란의 가스터빈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조세혜택과 연구개발보조금 정책을 사용한 다른 아시아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은 공공조달정책, 학습과 교육에의 투자, 에너지정책 그리고 국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하여 가스터빈 산업을 발전시켰음.
 - 국내기업들에게 실천에 의한 학습 (learning-by-doing)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란정부(에너지부)는 1992년에 설립된 국영기업인 MAPNA에게 대부분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음. 또한, 이란의 국내 전력회사들은 의무적으로 MAPNA로부터 발전소 프로젝트를 주문하도록 요구되었음.
 - * 이러한 공공조달정책을 통하여 MAPNA 제품을 위한 국내시장이 조성됨과 동시에 외국기업들에 대한 MAPNA의 협상력이 제고됨. 정부 주도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MAPNA와 그 자회사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국내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됨.

- * 기술발전을 토대로 MAPNA와 그 자회사는 발전소 설비와 건설 등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포함한 타 중동국가에 수출
- 정부의 조달정책 뿐만 아니라, MAPNA의 안정적인 경영도 CoPS의 기술발전을 촉진하였음.
 - * 국영기업은 정치 변화에 따른 경영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 * 그러나, MAPNA는 지속적인 국내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영자들은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이외에도, 이란정부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의 발전을 활성화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
 - * 이란은 대규모의 전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소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란의 에너지산업은 여러 연료들 중 천연가스에 집중하게 되었음.

Session 6.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과 녹색성장

발표 1. 새마을운동과 성공마을 사례연구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자료에 입각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

-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개발도상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관심이 커지고, 해외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의 실제 내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
 - 해외의 관심이 높은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경우, 전국 34,500 여개 마을에서 동시에 전개되어 마을별 차이, 시기별 차이, 성공사례 유형별 차이 등이 있음에도 새마을운동의 실제 내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음.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마을회의록, 마을사업일지, 마을단위 사업결과보고서, 마을지도자들의 편지 등 귀중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남아 있으나 연구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마을단위에서 진행된 새마을사업의 유형별, 사례별 특징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함.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국가기록원 등에 남아 있는 구체적 자료들, 예컨대 마을회의록, 마을단위 사업일지, 마을사업보고서, 현지교육, 마을지도자 서신, 마을의 저축통장 등 일차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2. 새마을운동 기록물 속의 성공마을 스토리

- 소득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의 정부기록물, 마을기록물들을 보면, 소득증대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으며, ‘잘 살기운동’이라는 운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민, 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노력하였음.
- 소득증대 실현을 위해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정부와 마을지도자들은 마을의 전통적 사회구조를 「발전주의적 마을 구조」 (Developmental Village)로 혁신하였음.
 - 상업적 농업이나 이윤추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였음.
- 새마을운동 방법으로서 도입된 「복차소득」 방법은 마을을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여 주민들의 비즈니스 능력을 제고시킨 혁신적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적용된 혁신적 지역개발 방법이었으며 「발전주의적 마을」 운영의 핵심적 방법의 하나였음.
 - 복차사업은 공동체적 발전과 주민 개인의 발전을 연계하되 인센티브, 주식회사 원리, 시장원리 등을 도입하여 마을기업 (Community Business) 모델의 선구적 형태가 됨.
 - 복차사업을 위한 조성된 마을기금을 새로운 복차사업에 2, 3차 반복 투자하여 주민소득과 마을기금의 발전을 도모하되 모든 결정은 마을 총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음.
- 새마을사업의 방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방법은 정부가 물자, 자재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노동과 토지를 기부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완수하는 매칭모델의 ‘새마을방식’이지만 새마을운동기록물을 보면 전국 마을에서 매우 다양한 풀뿌리혁신이 전개되어 마을소득과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왔음.

- 충청남도 당진군 출포리 마을의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채 1972년에 자력으로 간척사업에 성공하였음.

→ 간척사업 성공으로 호당 경지 면적 확대, 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음.

- 충북 제천군 도곡리의 새마을지도자는 정부의 도움 없이 고추재배를 발전시켜 자신과 도곡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왔고 재배 교본까지 만들어 유명 강사가 되었음.

□ 성공마을에는 유능한 지도자, 리더십 팀이 있었으며 마을지도자들은 전통적 마을지도자와는 다른 발전주의를 체득한 변혁적 지도자들이었음 (transformative leadership).

- 마을지도자들이 남긴 편지, 구술, 사업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

□ 마을지도자와 주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새마을교육은 현장위주, 그룹토의, 실용주의 등이 중요함.

3. 새마을운동의 지속의 조건으로서 선순환 구조: 성공마을의 사례

□ 전국마을에서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은 다른 나라의 발전정책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이며, 이러한 지속을 가능케 한 「선순환 구조」가 있음.

□ 새마을사업의 선순환구조는 「정부 자재 지원으로 자극 → 농촌인프라 개선으로 동기 유발 → 협동 참여 → 자조협동정신 → 확대재생산」으로 정리할 수 있음(고건 2010:20).

□ 성공사례마을들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소득증대 사업의 확산에 성공하였음.

- 충남 당진군 출포리의 사례: 「1972년 새마을사업의 성공 → 자립마을 선정 → 자립마을 선정 시상금 → 시상금을 소득사업에 투자 → 소득사업투자 성공으로 대통령하사금 → 대통령하사금으로 복차사업 실시 → 복차사업의 노임소득 25%를 또 다른 소득사업(굴양식)에 투자 → 굴양식으로 소득증대」의 선순환 구조, 확대 재생산을 가져옴
- 경기도 용인시 동막골의 사례: 「새마을사업 우수 마을 선정 → 대통령 하사금 → 마을총회에서 이 하사금으로 마을목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모자라는 금액 약 30만원은 주민 출자) → 목장사업으로 얻은 소득으로 인삼재배 (지속적 고소득 작목)

4. 새마을운동의 해외전파를 위해 고려할 점

-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에서 추진되어 마을의 전통, 마을의 인간관계, 주민들의 태도 등을 잘 아는 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의 해외전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해외 현지의 마을구조, 마을의 전통, 주민들의 사고방식 등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임.
- 마을 혁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정부, 마을, 시장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함
 - 농가소득은 단시일에 달성하기 어려움 경우가 대부분임.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가격정책, 농협의 지원, 농업종자 개량, 마을지도자 후원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필요함

- 새마을운동기에 전국 34,500 여 마을 모든 곳에 남자 지도자 1명, 여자 지도자 1명이 있었으며 이들의 사기진작과 교육에 정부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됨.
- 농가소득 향상은 매우 역동적 과정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지침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음.
 - 초기 새마을운동에는 「정부의 자극」이 중요했으나 마을단위에서 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풀뿌리 혁신을 통해 소득증대에 성공한 마을도 많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혁신의 중요한 환경이 됨.
 - 마을 사정에 맞게 주민들과 마을지도자들이 추진하는 풀뿌리 혁신이 주민소득 증대에 매우 중요함.
- 낙후마을과 마을의 실패(community failure)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마을의 자율적 경쟁을 낭만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됨.
 -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는 낙후마을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마을단위에 모든 것을 일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기술지도, 역량평가, 사후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

발표 2. 도시 녹색화와 경제성장

샤히드 유서프 (조지워싱턴대, The Growth Dialogue 수석 이코노미스트)

1. 녹색 경제의 추세 및 전망

- 녹색 기술의 육성과 제도의 개혁 등이 요구되는 녹색 경제로의 이행은 기존의 산업 기반, 인적 자본 및 경쟁력과 같은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
- 자원의 남용과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의 저감을 목표로 하는 녹색 경제의 실현은 도시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 전 세계적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는 곧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 수출 지향적이며, 인구, 자본, 지식 유입에 개방적이고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일수록 녹색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혜택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창조하거나 다른 도시의 혁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일수록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녹색 성장이 정부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시 생산 시스템, 교통, 에너지 소비 등에서의 삶의 방식, 도시 공간 설계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과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장기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음.

2. 녹색 성장의 동력

- 석유나 가스와의 같은 에너지원과 공공재에 대한 가격 체제의 개편, 정부의 R&D 정책, 벤처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적인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신 교통 기술, 고밀도 다목적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 계획, 그린 빌딩 및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정부의 조달 정책,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의 분야에서 녹색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될 것임.

3. 녹색 성장의 사례와 가능성

-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가 녹색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반면, 핀란드의 헬싱키와 같은 몇몇의 북유럽 국가의 도시에서는 친환경 기술과 녹색성장 동력에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장기간 투자하는 등 도시의 녹색 성장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예컨대, 1993년부터 2008년간 연 3.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녹색 기술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오염의 피해로 촉발된 중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은 도시의 녹색화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중국의 녹색성장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투자가능 자본이 풍부한 시점에서 시도되고 있고 거대한 내수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녹색 분야의 신기술을 창출 또는 도입,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임.
 - 상하이, 텐진, 선전과 같은 수출지향적 도시에서 녹색 산업과 녹색 무역 등을 통해 녹색 성장의 중단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와 도시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Session 7. 경쟁력 있는 인력 개발

발표 1.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기여 유럽 경험의 실증분석

조 릿존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교수)

1. 보고서의 목적

- 전세계적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32개 국가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① 대학에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교육, 연구, 지역사회의 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
- ② 대학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분석에 사용된 방법

-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의 방법을 이용, 유럽 각국의 고등교육정책 각종 관련지표를 재정지원, 대학의 경영자율성, 대학의 정책자율성의 세 요소로 나누어 척도화
-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요인분석의 기법을 활용, 각국의 대학시스템의 성과를 연구성과의 질을 포함한 연구 생산성,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졸업률 및 고용연결성 등 세 요소로 나누어 측정
-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여에 관해서는 노동생산성 및 지식집약산업의 고용비율을 고려. 요인분석의 결과 유럽의 경우 두 지표의 상관성이 높아 한 가지로 요소로 집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 고등교육정책, 대학의 성과, 사회발전에의 기여의 세 측면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정책이 대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지, 아울러 대학의 성과가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지를 추적.

3. 주요 결과

□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의 성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대학의 연구성과는 고등교육 부문에의 재정지원 및 경영자율성 제공을 통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졸업률, 취업연계율 등 교육분야의 성과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에 정책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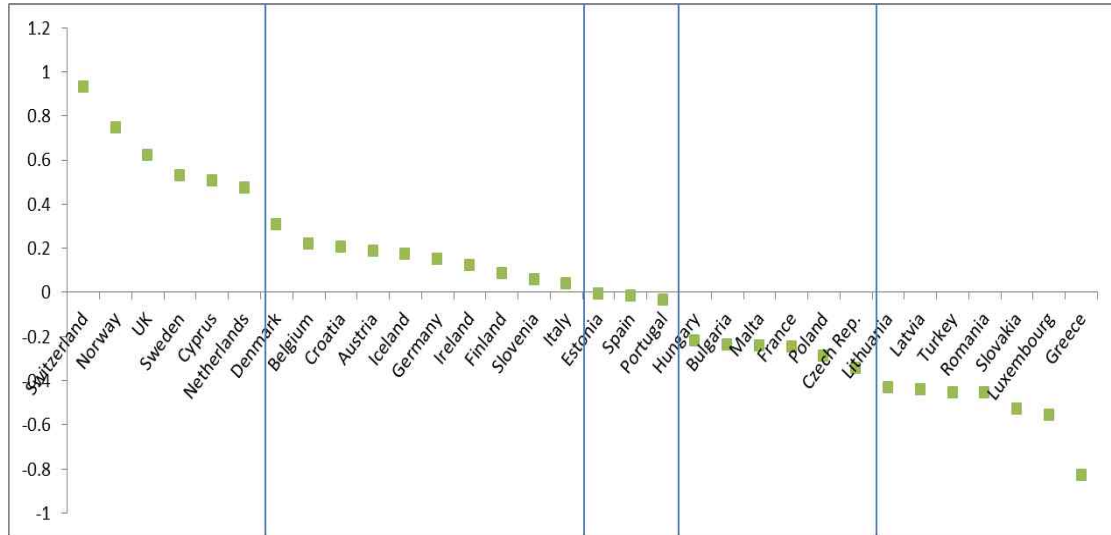
□ 대학의 성과와 사회경제의 혁신역량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성과는 질을 포함한 연구 생산성 아울러 졸업률, 취업연계율로 대표되는 교육성과임.
- ②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은 사회경제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유럽 각국의 고등교육정책 시스템이 사회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에 얼마나 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척도화하여 비교할 수 있음(그림 참조).

- 유럽 각국 가운데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등의 고등교육정책이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가장 잘 조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가운데에서는 영국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프랑스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대학의 성과: 혁신 역량



4.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자율성의 제고가 대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 ② 유럽 각국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국경을 넘은 대학간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함.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서의 조율이 필요함.

발표 2. 경제성장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역할: 한국의 사례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중요성

- 직업기술교육훈련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전략 (Skills Development Strategy)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인력의 공급, 노동생산성 제고, 빈곤 해소 그리고 소득분배 균등화에 기여함.
- 이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2. 개발도상국의 경험

- 그러나 과거 정규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일반교육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직업교육보다는 일반 기초교육(basic education)에 우선 투자해 왔음.
- 최근 들어 일부 연구에서 직업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직업 내용과 학교 교육내용의 일치도가 높을 경우 이들의 직업만족도, 노동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발도상국 직업기술교육훈련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증거가 존재해 있음을 말해 주며, 투자 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3. 한국 사례 분석의 의미

- 개발도상국 직업기술교육훈련 투자 정책 수립·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사례 분석을 들 수 있음.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사례가 개발도상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4.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 직업기술교육훈련은 학교,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기업 등 세 종류 기관을 통하여 제공됨. 정부의 당면 정책과제는 이 세 가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여하히 조정, 연계하여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임.
- 한국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할 때, 기능·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음. 그러나 1960년대 초기에는 이렇다 할 제도화된 직업기술교육훈련 기반이 없었음. 한국 정부는 1963년 우선 정규 고등학교에 국가 직업교육과정을 도입하고, 5년제 직업학교를 설립함.
- 그러나 이들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기능·기술인력의 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1967년 직업훈련제도를 도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 1970년대 국제기구 및 선진국 도움으로 공공 직업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시작. 이와 함께 직업훈련기본법(1976)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직업훈련 제공을 의무화함. 직업훈련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조성, 이를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제도 운영에 사용함.
- 1990년대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직업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꿈. 즉 과거 정부 주도의 입직전 직업훈련에서 시장기제에 기반한 수요 중심 계속훈련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구조 및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규 교육에서도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문대학 및 대학단계로 전환.

5.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① 국가 경제성장의 단계와 속도 (기술수요 및 고용기회 파악)
 - ② 정부 및 민간부문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제공 역량 (경제력 및 인적자원)
 - ③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
 - ④ 국가 자격제도의 운영
 - ⑤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정
 - ⑥ 기초교육의 제공
 - ⑦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